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3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6건)

- ①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 ('23.1.31)
- ②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과 직접 소통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동력 확보('23.2.7)
- ③ 국민권익위, APEC 반부패투명성 회의에서 UN 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발표('23.2.15)
- ④ 국민권익위, 유엔개발계획과 손잡고 개도국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개선 지원 나서('23.2.14)
- ⑤ 국민권익위,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중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가장 많아"('23.2.9)
- ⑥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 권익 강화한다"('23.2.2)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

국제투명성 기구(TI) 발표한 국가청렴도
전세계 180개국 중 31위, 6년 연속 상승

(23. 1. 3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31일 발표한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3점, 180개국 중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 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한 단계 올랐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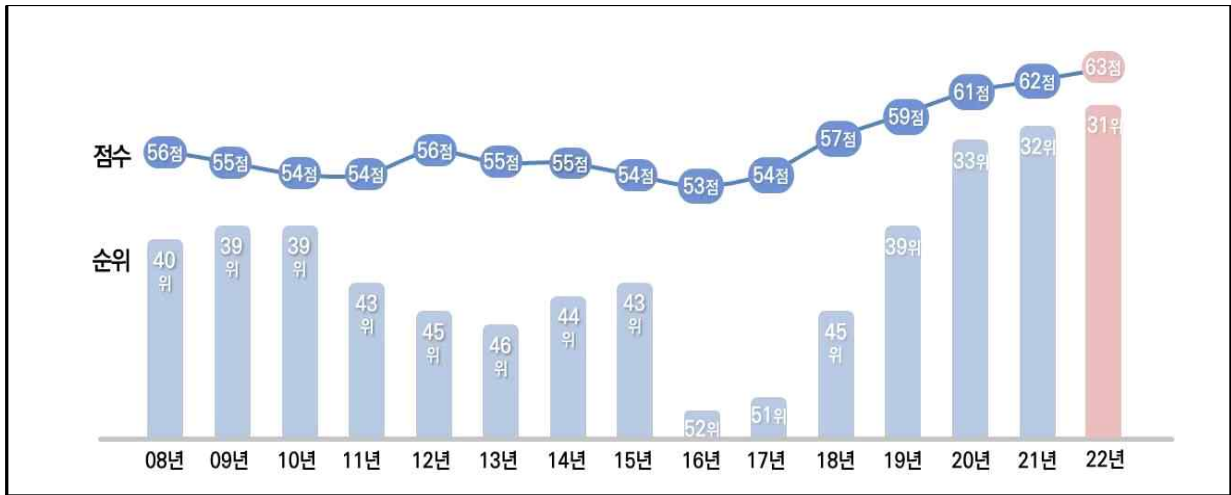
*'17년 51위(54점)→'18년 45위(57점)→'19년 39위(59점)→'20년 33위(61점)
→'21년 32위(62점)→'22년 31위(63점)

국가청렴도(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 반부패 제도의 도입 운영 시기 >



〈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변화 추이 〉



이번 결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의지 및 노력,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과 국민,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패방지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반부패 제도를 보완·정비해 국가청렴도 향상을 주도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시행으로 반부패 법률의 제도화를 완료해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향상시켰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91.2%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22.11.7.~18) 진행, 4,482명 응답

법무부, 공정위 등은 부패범죄의 효과적 적발·처벌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분야 등 경제범죄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의 성과는 작년 11월 발표된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Bribery Risk Matrix) 결과와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트레이스(협회)가 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을 평가하는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뇌물위험수준이 ‘매우 낮음(very low)’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격년 발표)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청렴도의 향상은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므로, 이번 국가청렴도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국가청렴도(CPI) 10점 상승시 2030년 GDP 153조원 증가(‘부패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대, ’17.11월),
IMF Fiscal Monitor 2019(Chapter 2 Curbing Corruption)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한 반부패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이번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22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현황

□ 국가는 OECD 회원국 38개국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1	Denmark	90	49	Fiji	53
2	Finland	87	49	Slovakia	53
2	New Zealand	87	51	Cyprus	52
4	Norway	84	51	Greece	52
5	Singapore	83	51	Grenada	52
5	Sweden	83	54	Malta	51
7	Switzerland	82	54	Rwanda	51
8	Netherlands	80	54	Saudi Arabia	51
9	Germany	79	57	Croatia	50
10	Ireland	77	57	Mauritius	50
10	Luxembourg	77	59	Namibia	49
12	Hong Kong	76	60	Vanuatu	48
13	Australia	75	61	Jordan	47
14	Canada	74	61	Malaysia	47
14	Estonia	74	63	Armenia	46
14	Iceland	74	63	Romania	46
14	Uruguay	74	65	China	45
18	Belgium	73	65	Cuba	45
18	Japan	73	65	Montenegro	45
18	United Kingdom	73	65	Sao Tome and Principe	45
21	France	72	69	Bahrain	44
22	Austria	71	69	Jamaica	44
23	„,Seychelles	70	69	Oman	44
24	United States of America	69	72	Benin	43
25	Bhutan	68	73	Bulgaria	43
25	Taiwan	68	73	Ghana	43
27	Chile	67	73	Senegal	43
27	United Arab Emirates	67	73	South Africa	43
29	Barbados	65	77	Burkina Faso	42
30	Bahamas	64	77	Hungary	42
31	Israel	63	77	Kuwait	42
31	Korea, South	63	77	Solomon Islands	42
33	Lithuania	62	77	Timor-Leste	42
33	Portugal	62	77	Trinidad and Tobago	42
35	Botswana	60	77	Vietnam	42
35	Cabo Verde	60	84	Kosovo	41
35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60	85	Guyana	40
35	Spain	60	85	India	40
39	Latvia	59	85	Maldives	40
40	Qatar	58	85	North Macedonia	40
41	Czechia	56	85	Suriname	40
41	Georgia	56	85	Tunisia	40
41	Italy	56	91	Belarus	39
41	Slovenia	56	91	Colombia	39
45	Dominica	55	91	Moldova	39
45	Poland	55	94	Argentina	38
45	Saint Lucia	55	94	Brazil	38
48	Costa Rica	54	94	Ethiopia	38

94	Morocco	38	137	Russia	28
94	Tanzania	38	140	Kyrgyzstan	27
99	Cote d'Ivoire	37	140	Pakistan	27
99	Lesotho	37	142	Cameroon	26
101	Albania	36	142	Liberia	26
101	Ecuador	36	142	Madagascar	26
101	Kazakhstan	36	142	Mozambique	26
101	Panama	36	142	Uganda	26
101	Peru	36	147	Bangladesh	25
101	Serbia	36	147	Guinea	25
101	Sri Lanka	36	147	Iran	25
101	Thailand	36	150	Afghanistan	24
101	Turkey	36	150	Cambodia	24
110	Bosnia and Herzegovina	34	150	Central African Republic	24
110	Gambia	34	150	Guatemala	24
110	Indonesia	34	150	Lebanon	24
110	Malawi	34	150	Nigeria	24
110	Nepal	34	150	Tajikistan	24
110	Sierra Leone	34	157	Azerbaijan	23
116	Algeria	33	157	Honduras	23
116	Angola	33	157	Iraq	23
116	El Salvador	33	157	Myanmar	23
116	Mongolia	33	157	Zimbabwe	23
116	Philippines	33	162	Eritrea	22
116	Ukraine	33	162	Sudan	22
116	Zambia	33	164	Congo	21
123	Dominican Republic	32	164	Guinea Bissau	21
123	Kenya	32	166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20
123	Niger	32	167	Chad	19
126	Bolivia	31	167	Comoros	19
126	Laos	31	167	Nicaragua	19
126	Mexico	31	167	Turkmenistan	19
126	Uzbekistan	31	171	Burundi	17
130	Djibouti	30	171	Equatorial Guinea	17
130	Egypt	30	171	Haiti	17
130	Eswatini	30	171	Korea, North	17
130	Mauritania	30	171	Libya	17
130	Papua New Guinea	30	176	Yemen	16
130	Togo	30	177	Venezuela	14
136	Gabon	29	178	South Sudan	13
137	Mali	28	178	Syria	13
137	Paraguay	28	180	Somalia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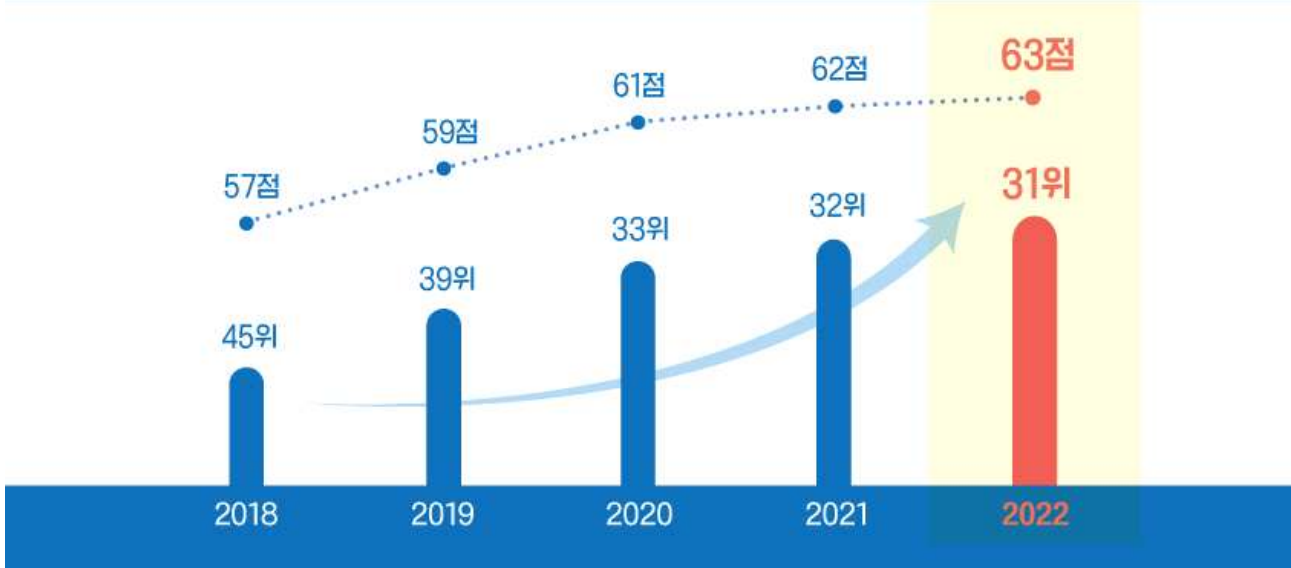


2022년도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세계 31위

역대 최고 성적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 강조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반영된 결과
-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개혁 추진 노력도 역대 최고 성적에 한 몫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과 직접 소통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동력 확보

7일~9일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 개최

(23. 2. 7. 국민권익위)

이번 달 7일부터 9일까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감사관들과 공공기관의 부패·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방안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가청렴도(CPI)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반부패·청렴 정책 방향은 크게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 등 부패 취약분야 발굴과 개선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맞춤형 청렴 컨설팅·교육 지원을 통한 공직사회 청렴역량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부패·공익 침해행위 해소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을 주관하는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올해 1월 출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 전수조사와 교육·컨설팅 지원방안, 공무원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대상 공정채용 기준 마련 등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부패·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또 정부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실태 점검 시 협조를 당부하고 부정 청구 빈발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논의한다.

이번 감사관 회의는 기관유형별로 7일 중앙행정기관, 8일 광역자치단체, 9일 오전·오후로 나누어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 순으로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참석대상 규모가 큰 9일 회의는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개최된다.

또 원활한 소통을 위해 회의 개최 전 자료를 미리 공유해 각급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의견과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은 그 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정책 반영을 검토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6년 연속 향상돼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라며, “이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묵묵히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해 온 공공기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여정에 공공기관 모두가 힘을 함께해달라” 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APEC 반부패투명성 회의에서 UN 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발표

부패영향평가 제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한국 반부패정책 공유

(23. 2. 15. 국민권익위)

이번 달 15일부터 이틀간 미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제36차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공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회의에 참석해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한 청렴윤리경영 지원 등을 발표한다.

경제주체의 주요 반부패 동향을 공유하고 반부패 국제연대를 위한 논의의 장인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에는 21개 APEC 회원국 반부패 기관 실무자,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 반부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올해 ACTWG 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로 ▲APEC 반부패 로드맵 ▲각 경제주체의 기업윤리 정책현황 ▲UN 반부패협약 이행상황 등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에는 뇌물방지에 관한 워크숍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UN

반부패협약의 주요 이행 성과를 발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공공기관 사규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 기존의 평가체계를 통합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이다.

또한, 반부패 기술지원과 관련,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을 UNDP와 협업해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등에 기술지원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청렴윤리경영 정책지원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반부패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주체 간의 반부패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국가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유엔개발계획과 손잡고 개도국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개선 지원 나서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반부패 기관 대상
청렴포털 시스템 지원 정책연수 진행

(23. 2. 14. 국민권익위)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3개국이 자국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4일부터 3일간 우리나라의 청렴포털 시스템 정책연수에 참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반부패 정책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청렴포털 공유사업 정책연수를 화상으로 실시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이다.

이번 정책연수는 사업참여 3개국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시스템인 청렴포털 운영 사례에 기반해 국가별로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의 자체 개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국들은 지난해 11월 청렴포털 공유사업 온라인 착수보고회 이후 국민권익위가 제공한 청렴포털 세부 자료를 바탕으로 자국의 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자체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연수과정은 각국 반부패 정책 추진 기관인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코소보 반부패청에 현지 언어로 진행된다.

최근 몽골은 신고자보호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효과적인 신고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청렴포털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에 주목해 202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신고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코소보는 청렴포털의 '신고도우미' 등 기능 편의성 증진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고도우미'는 신고자가 신고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 유형, 위반 행위 유형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책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렴포털 운영 경험이 각 국가의 신고시스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중 ‘재량남용 방지’ 개선 권고 가장 많아”

지난해 1,409개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324건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

(23. 2. 9. 국민권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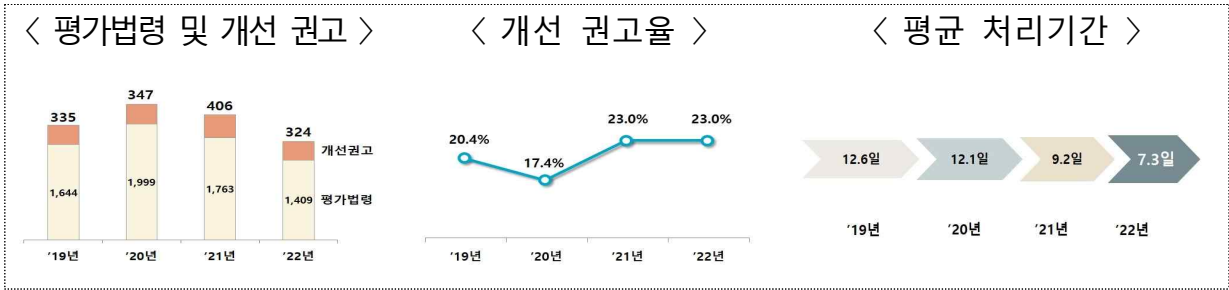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재량 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가 43.2%로 가장 많았다.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409개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36개 법령에서 324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개선 권고 324건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40건(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규정 63건(19.5%),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 55건(17.0%) 등의 순이었다.

평가 대상 법령은 2019년 대비 14.3%p(전년 대비 20.1%p)가 감소했으나 개선 권고율은 12.7%p(전년과 동일)가 증가했다. 평가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도 7.3일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가장 신속한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청이 정하도록 한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남용 소지를 차단했다.

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보호를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대상에 신고행위 외에 신고 관련 진술, 자료 제출 행위도 포함하도록 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연구부정행위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조사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범위를 구체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조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 ▲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자격기준을 내부편람이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행정 투명성 제고)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정보를 누리집 등에 공고(행정 공개성 확보) ▲ 도서관 자료 납본자 등에게 보상청구에 대한 사전안내 의무화(소극행정 방지 및 국민 청구권 보장) 등을 개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성욱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공공 부문의 부패 예방 노력을 지속해 왔고, 올해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국민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평가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1. 추진 현황 및 성과

□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보다 신속히 처리

○ 각 부처로부터 총 1,499개 제·개정법령에 대한 평가 접수

※ 대통령령 716개(49.4%) → 총리령·부령 597개(41.2%) → 법률 134개(9.3%) → 행정규칙 2개(0.1%)

○ '22년에는 최근 3개년 대비 가장 높은 개선권고율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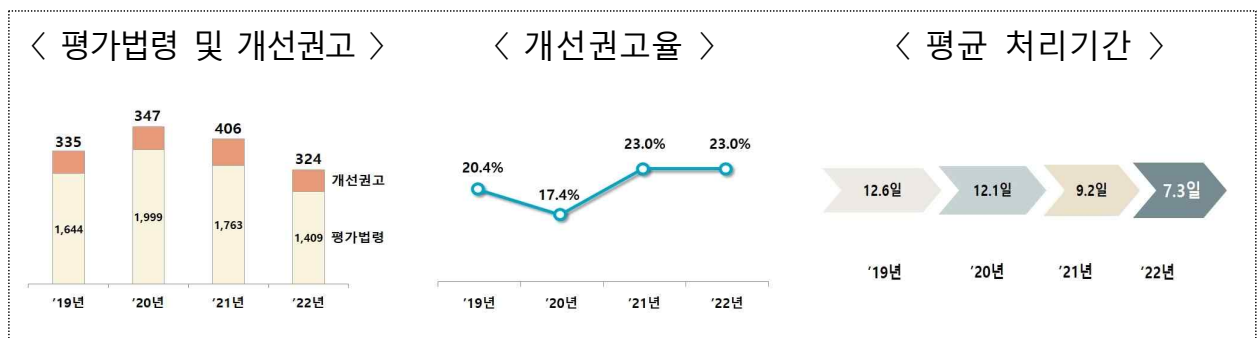
- 1,409개 법령을 평가하고, 9.7%인 136개 법령에서 324건 개선권고

- '19년 대비 평가법령은 14.3%p(전년대비 20.1%p) 감소했으나, 개선권고율은 12.7%p(전년과 동일) 증가

- 개선권고율은 최근 3개년 평균(20.3%)에 비해 2.7%p(23.0%)가 증가

○ 평가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소요기간 지속 단축

- 평균 처리기간은 7.3일로 기존 최단기간인 전년(9.2일) 대비 1.9일 앞당김



□ 법령을 대거 정비하여 공공부문의 부패발생 근본요인 제거

○ (법령종류별) 개선법령은 대통령령(95개, 69.9%)이 가장 많고, 총리령·부령(35개, 25.7%), 법률(5개, 3.7%), 행정규칙(1개, 0.7%) 순임

- 평가법령 대비 개선법령 비율은 대통령령(13.6%), 총리령·부령(6.1%) 순으로 법률 위임·시행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에서 개선율이 높음

(단위 : 개, %)

구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기타
계	1,409	131 (100)	701 (100)	575 (100)	2 (100)
개선법령	136	5 (1.5)	95 (13.6)	35 (6.1)	1 (50)
원안법령	1,273	126 (98.5)	606 (86.4)	540 (93.9)	1 (50)

- (법령분야별) 산업개발(31개, 22.8%), 일반행정(27개, 19.9%), 교육문화(21개, 15.4%)가 전체의 58.1%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집중 개선
- (기관별) 평가의뢰 상위부처는 국토부(170개), 기재부(119개), 행안부(91개) 순이고, 과기부는 개선법령(14개), 문체부는 개선권고(43건) 최다

(단위 : 개, 건, %)

구분	의뢰 법령	평가법령			
		계	개선법령	개선권고	원안법령
계	1,449	1,409(100)	136 (9.7)	324	1,273 (90.3)
1. 문화체육관광부	52	48 (100)	12 (25.0)	43	36 (75.0)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6	56(100)	14(25.0)	38	42 (75.0)
3. 기획재정부	119	119 (100)	10 (8.4)	34	109 (91.6)
4. 행정안전부	91	91 (100)	7 (7.7)	19	84 (92.3)
5. 해양수산부	80	80 (100)	11 (13.8)	16	69 (86.23)
6. 국토교통부	170	169(100)	9 (5.3)	15	160 (94.7)
6. 문화재청	15	15(100)	3 (20.0)	15	12 (80.0)
기타(복지부 등 34개 기관)	866	831 (100)	70 (8.4)	144	761 (91.6)

- (평가기준별)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140건(43.2%)으로 가장 많고, 예측가능성(63건, 19.5%), 이해충돌가능성(55건, 17.0%) 순

(단위 : 건, %)

분야	평가기준	건수	분야	평가기준	건수
		계			324 (100)
준수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2 (0.6)	행정 절차	⑦ 접근의 용이성	3 (0.9)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16 (5.0)		⑧ 공개성	17 (5.3)
	③ 특혜발생 가능성	4 (1.2)		⑨ 예측가능성	63 (19.5)
집행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40 (43.2)	부패 통제	⑩ 이해충돌가능성	55 (17.0)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1 (3.4)		⑪ 부패방지장치 체계성	5 (1.5)
	⑥ 재정누수 가능성	3 (0.9)		⑫ 소극행정 유발가능성	5 (1.5)

2. 주요 개선권고 내용

- (재량남용 방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소지 차단
- (부패방지체계 강화) 공무원의 부패·공익신고 보호를 위한 불이익 조치 금지대상 행위에 신고 외에 신고 관련 진술, 자료 제출 행위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 활성화 유도
- (위원회 공정성 제고)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구체화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로 조사의 공정성 확보
- (예측가능성 제고) 외국국적동포 방문취업 자격기준을 업무편람이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 (공개성 강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공고방법을 명확히 하여 정보 접근성 확대
- (소극행정 가능성 차단) 도서관 자료 납본자 등에게 자료제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여 국민 청구권 보장 및 소극적 업무처리 방지

□ **개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내부규정(사규)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현행 법령 등) 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해,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면제 등 국민권익 강화한다”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해 구조금 지급 신설

(23. 2. 2. 국민권익위)

앞으로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액과 함께 당사자에게 부과되던 이자가 면제되고,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고의의 부정수급자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한다. 또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를 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부과 면제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 신설 ▲행정청에서 인지한 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면제범위 축소 ▲공공재정지급금 허위·과다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등을 포함했다.

* 구조금: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소송비용, 이사·치료비용, 임금손실 등 손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

그동안은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공공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에 이자까지 함께 환수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앞으로는 잘못 지급된 금액만 환수하고 이자를 면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정했다.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구조금 제도도 신설됐다. 부정수급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용, 변호사 비용과 같은 소송비용 등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행정청이 알게 돼 조사하면 부정수급한 사람은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현행법령에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청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중이더라도,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급자가 이를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해 줬다.

- * 부정이의 반환·제재부가금 부과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 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해야 함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청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기 전에 한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고, 행정청의 부정수급 사실 인지 후의 자진신고시에는 제재부가금 감면액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자진 신고의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령에서는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자에게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은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홍보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다.